업 무 보 고

2022. 7. 15

과학기술정보통신부

목 차

Ⅰ. 핵심 추진과제 ····· 1

1 국가 연구개발(R&D) 체계 혁신 ····· 1

2 미래 혁신기술 선점 ····· 2

3 기술혁신 주도형 인재 양성 ····· 4

4 국가 디지털 혁신 전면화 ····· 5

5 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 ····· 6

Ⅱ. 공통과제 이행계획 ····· 7

1 규제 혁신 ····· 7

2 공공기관 혁신 ····· 8

3 위원회 정비 ····· 9

Ⅰ. 핵심 추진과제

평가 및 향후방향

◈ 그간 **정부 주도**로 **「과학기술 입국」** 및 **「ICT 강국」** 달성

◈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 대규모 재정투입(뉴딜 등)이 불가피 했으나, **기술패권 경쟁 심화**로 **민간의 창의성 없이는 혁신에 근본적 한계**

- 정부 주도 → **민간·기업·시장 중심**으로 전환하여, **파급력이 큰 기술혁신**을 이끌고 그 **효과를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산**할 필요

☞ **민관협력 기반**으로 **국가혁신체제**를 새롭게 구축하고, **선도형 기술혁신** 및 **디지털 혁신** 확산으로 국가사회 발전 기여

- **민간** 주도, **성과** 중심, 변화에 **유연**한 **연구개발(R&D)** 체계로 전환
- **민관의 역량**을 결집해, **미래 혁신기술** 선점 및 **탁월한 인재** 양성
- **민간과 함께 디지털 역량** 강화 통한 **국가 혁신·포용사회 실현**

1 초격차 기술력 확보 위한 국가 연구개발(R&D) 체계 혁신

□ 개요

○ 글로벌 **기술패권경쟁** 시대, **R&D 컨트롤타워**로서 **위상을 재정립**하고 다시 한번 우리 경제·사회 변혁을 이끌 **대형성과 창출**

⇨ **민간이 끌고 정부가 밀며, 선택과 집중, 변화에 유연한 시스템** 설계

□ 세부 내용 및 이행계획

○ **(주제 : 국가 전략기술 집중)** 국가 생존을 좌우할 **전략기술**(22. 9월)을 **선정**하고, 중점기술 및 개발목표를 포함한 **전략 로드맵** 마련(23년)

* 반도체·디스플레이, 우주·항공, 인공지능, 양자, 차세대원전 등 10개+α

-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**범부처 사업**에 대한 **통합적 R&D 예산 배분·조정 시스템** 도입(23년~)

○ **(기획 : 민간주도·정부지원) 민관협의체**(장관+기업 CEO)를 운영하며, **최고 민간전문가(PM)**가 직접 **'초격차 전략기술 프로젝트'** 설계(22년~)

- 또한 **지역**이 **민간 창의성 발휘의 거점**이 되도록, **지역특화 메가 프로젝트** 및 **연구개발특구** 지원 강화(규제특례+금융펀드)

○ **(제도 : 신속·유연성 보장)** 급격한 기술환경 변화에 **효과적으로 대응**토록 **R&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**(22. 12월, 법 및 훈령 개정)

조사대상	총사업비 500억원 이상	▶	총사업비 **1,000억원** 이상 (대형화)
조사기간	총사업비 차등없이 9~11개월		총사업비 3,000억원 이하인 경우 **6개월**
사업내용	예타 통과 후 수정 불가		급격한 환경변화(코로나, 수출규제 등)시 **예타 통과 후에도 계획 변경 가능**

□ 장애요인과 대응방안

○ 전략기술은 **범부처가 협업해야 할 핵심 국정과제**로 **강한 추진력** 필요
⇒ 체계적 지원 위해 **「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」 제정**(22. 2월, 국회제출)

2 미래 혁신기술 선점

□ 개요

○ **민관 공동개발, 수요·시장 창출, 민간 기술이전** 등 다양한 방식으로 **민간투자**를 유도하며, 기술개발(R&D) 기반 위에 **미래 유망 신산업 선점**

□ 세부 내용 및 이행계획

○ **(첨단 분야 : 민관 공동 개발)** **양자, 바이오, 6G** 등 **태동하는** 분야는, **민관 협업**으로 **기초·원천 기술개발** 및 **핵심특허의 조기 확보** 주력

■ **(양자) 기업연계 플래그십** 등 산학연 협력연구 통해 세계 3번째로 **50큐비트급 양자컴퓨터**(~26년, 490억원) 및 **양자인터넷**(~26년, 456억원) 개발로 **원천기술 신속 확보**
* (美) '22년 IBM社 127큐비트 서비스 시작, (中) '21년 중국과기대 50큐비트 구축

■ **(바이오) 뇌과학·합성생물학** 등 **첨단바이오** 분야를 중점 지원하고, **바이오+디지털 융합연구**(AI 활용 신약개발, 디지털치료제 등) 확대

■ **(6G)** 조기 상용화(30→28년)에 대비, 초기부터 기업이 참여하는 대규모 R&D(~30년, 약 1조원) 통해 **6G 국제표준**과 **핵심특허**를 확보(~26년, 48건)하고, **26년 세계최초 pre-6G 기술 시연**

○ **(주력 분야 : 수요 창출)** 강점 보유 **반도체, 소형원전, 디지털 신산업** 등은 **공공수요 창출** 등 통해, **차세대 기술→최단시간 시장 진입** 지원

- **(반도체) AI 반도체, 화합물 반도체** 등에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(향후 5년간 1.1조원), 데이터센터 및 공공사업(스마트공장 등)으로 **국산기술 실증·적용** 등 **초기수요 창출**
- **(소형원전)** 기존 노형 대비 **안전성·경제성·유연성** 면에서 뛰어난 **차세대 소형원전**(SMR, Small Module Reactor)을 개발(28년까지 3,992억원)하고, **해외수출** 추진
- **(디지털 신산업) AI, 데이터, 메타버스** 등을 디지털 혁신을 위한 핵심분야로 선정하고, **메타버스 10대 서비스 실증**(22년 340억원, 재난안전·복지 등)을 통해 **초기시장 마중물** 지원
- **(사이버보안) 4대 방어체계**(억제→보호→탐지→대응) 및 **클라우드·AI** 기반 **기술개발을 강화**하고, 보안산업을 '**사이버 방위산업**'**으로 전략적 육성**(22년 928억원)

○ **(국가주도 분야 : 기술이전)** **위성, 발사체** 등 **우주기술**은 **기업에 이전**해 **체계종합기업**(제작+발사운용) 육성, 중장기적으로는 **민간주도**로 전환

- 관련기업·발사장 집적 지역에 **우주산업 클러스터**를 지정(22. 8월, 우주위)하고, **우주 탐사, 한국형위성항법(KPS)** 등으로 **우주경제 시대** 촉진

* 국내최초 달궤도선 발사(22. 8월, 플로리다), 국내최대규모 KPS 사업 착수(~35년, 3.7조원)

□ 장애요인과 대응 방안

○ '누리호' 성공을 계기로, 대한민국 **우주경제 실현**의 **본격화** 위해,

- R&D·산업·안보·외교 등을 포괄하는 **범부처 '우주개발 기본계획'**을 수립(22. 12월)하고, **항공우주청 신설** 추진

○ **반도체 패권경쟁** 시대를 맞아 **민관총력체제**를 **위해 산학연**이 보유한 **장비·인프라** 등을 **연계·공동활용**하는 체계 구축
(22. 하반기, **반도체 팹(Virtual Fab)**을 시작으로 확산)

* 서울대 반도체연구소, KAIST 종기원, ETRI 등 10여 개 기관 나노팹 연계 ⇒ 교육 연구·기업 지원 강화

□ 기대효과

○ **제2의 반도체** 같은 10~20년 후까지 우리 미래를 책임질 원천기술 확보로 과학기술·디지털 기반 경제·산업 발전 견인

3 기술혁신 주도형 인재 양성

□ 개요

○ 인구감소 시대, 양적 아닌 **질적으로 탁월한 인재 양성**이 불가피

⇨ **단기 민간수요 맞춤형** 인재, **중장기 최고급** 인재 양성에 초점

□ 세부 내용 및 이행계획

단기 **민관 역량을 총 결집한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**

○ **(기청 계약정원제)** 반도체 등 인력난이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**기초교육(대학)+응용교육(기업)이 결합된 유연한 학사제도** 신설 협의(교육부)

* 기존학과 내 정원을 한시 추가하는 형태 ⇒ 교육부는 「계약학과 운영규정」 개정 추진(22. 7월~)

○ **(패스트러닝 트랙) 1년 속성 마이크로 학위**(22. 9월, KAIST) 및 **디지털 학·석사 통합과정**(23년~, 3.5+1.5년) 확산

○ **(민관협력형 과정) 기업**이 **채용과 연계**하여 직접 **설계한 과정** 및 재직자 1:1 멘토링 등을 통한 **실전형 교육** 지속 확대

중장기 **최고급 인재 확보를 위한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**

○ **(재능사다리) 역량 있는 인재**에게 **성장기회를 지속 제공**할 수 있도록 다양한 **인재 양성 사업 간 연계 사다리 구축방안 마련**(22. 下)

실무인재 트랙	▶	전문인재 트랙	▶	최고급인재 트랙
교육과정 수료		온라인 테스트 면제 등 우선 선발권 부여		대학원 입학 시 추천서 발급 등 지원

○ **(한우물파기) 우수 연구자**에게 최대 10년간 **장기·안정적 지원**(23년~)

○ **(글로벌 트랙) 우수 박사후연구원(postdoc)**의 **국외 선진기관 연수** 제공(23년~, 연 50여 명) 및 **해외 석학·인재 유치**(필즈상 수상 허준이 교수 사례)

□ 장애요인과 대응방안

○ 성과 창출 위해 부처간 **역할 분담(보편성 vs 수월성) 및 협업** 필수

- 과기정통부는 **4대 과기원** 등 통해 **다양한 제도를 선제 도입**

④ 국가 디지털 혁신 전면화

□ 개요

○ **세계 최고수준의 디지털**(AI·SW, 데이터 활용 등) **역량**을 확보하고 디지털 확산 가속화 통해 **국가 디지털 혁신 전면화**

□ 세부 내용 및 이행계획

○ **(역량 강화) 도전적 R&D** 및 **데이터의 연계·활용 확대**를 통해 **글로벌** 수준의 AI **역량을 확보**하고 **산업·사회 전 부문**에서 **AI 융합**

* 차세대 AI 핵심기술 개발(~26년, 3,018억원), 10대 분야에서 難題해결 AI 프로젝트(23년)

- 민간 클라우드 활성화, 자체 시스템 구축→서비스 구매 방식 전환, 유망 SW의 수출 지원 등으로 **국내 SW산업**의 **근본적 체질 개선**

○ **(산업 육성)** 플랫폼, 메타버스, OTT 등 **신산업 분야**에서 **초기시장 창출***을 지원하고, **청년 창업** 및 우수 **디지털기업**의 **성장 지원 강화****

* 메타버스 서비스 실증(22년, 340억원) ** 컴퓨팅자원·데이터 제공, 콘텐츠 제작 지원(22년~)

○ **(확산)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**을 **바우처** 방식으로 지원하고(22년 2,332억원), **지역 특화산업**과 연계한 **지역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** 추진(23년)

* (부산) 패션·뷰티, (대구) 헬스케어·로봇, (대전) 국방·모빌리티, (세종) 미디어 등

- 관계부처와 함께 **「디지털플랫폼정부」 선도 프로젝트** 추진
(예 : 실손보험간편청구, 부동산거래디지털화 등)

□ 장애요인과 대응 방안

○ **주요국***은 전략적 수단으로 **국가 차원의 디지털 정책** 추진

* (美) 디지털 기술 투자(~26년, 2,500억불), (英) 영국 디지털 전략(22. 6월), (EU) Digital Compass(21. 3월)

⇨ 우리도 **민관**이 함께 **디지털 혁신을 확산**하고 **국민이 체감하는 변화**를 만들어내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**「디지털 국가전략」** 수립(22. 8월)

* 산업계·학계·연구계 등의 현장의견 수렴 위한 릴레이 간담회중(2차관 주재, 6월~)

⑤ 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

□ 개요

○ **비대면·온라인 시대** 통신비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제고, 플랫폼 상생 생태계 조성 등을 지원하고,

- 복잡·다양해지는 사회문제에 대한 **기술적 해결 노력** 강화

□ 세부 내용 및 이행계획

○ **(이용자 부담 완화) 5G 중간요금제**(22. 8월) 출시 및 **어르신 전용 요금제, 청년층 데이터 지원** 등 계층별 맞춤지원 확대(23. 상반기~)

○ **(취약계층 지원 강화) 농어촌(격오지 포함)**까지 **초고속 인터넷망을 확대**해 나가고(25년까지 1,635마을 추가구축),

- **전국 공공장소**(전통시장·공원 등) 1만개소에 **누구나 무료로 이용**할 수 있는 **공공 와이파이 확충** 및 **시내버스 와이파이 속도 3배** 개선

- **지자체**와 함께 스마트경로당, 결식아동 급식지원 플랫폼(오프라인 바우처와 배달앱 연동) 등 **디지털기술의 포용적 활용 확산**(22년 대구, 경기)

- **보이스피싱 방지**를 위해 부정개통 방지, 범죄이용번호 신속차단 등의 대책을 마련(22. 하반기)

○ **(플랫폼 기반 사회기여 촉진)** 입점기업(소상공인) 판매 지원, 소외계층 교육 등 **플랫폼 기업**의 **사회적 기여**를 촉진하는 **서비스 개발** 지원(22년~)

○ **(사회문제 해결 R&D 확대) 보건·안전·환경**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**디지털·과학기술로 문제해결을 지원**하고 체감효과 거양

* 예) 3대 안전 분야(도시·일터·시설물) 디지털 적용, 과학기술 활용 지역문제 해결(행안부 협업) 등

○ **(우체국 사회 공헌)** 전국 **우체국**을 **국민생활 밀착 서비스 기관**으로 활용

* 찾아가는 복지행정인 복지등기 시범서비스(22. 7월, 부산),
우체국 창구에서 시중은행 업무 통합 제공(22. 6월, 4대은행과 업무협약)

Ⅱ. 공통과제 이행계획

1 규제 혁신

〈 추진 방향 〉

◆ **주제(분야)별 혁신** 통해, 해당 분야의 덩어리규제 개선에 주력

- 특히 디지털을 비롯한 신기술은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글로벌 경쟁이 심해 **시대에 뒤처진 규제, 외국과 불균형한 규제** 해소 집중

디지털 플랫폼·서비스

• 이용자 편익 위해 **포괄적 기술기준 채택**(예 : 스마트폰 가입자식별모듈(SIM) 다양화로 비대면 개통 편의 제고 등)

연구자

• **해외 우수연구자 유치**를 위한 연구비 제도개선(체재비·장려금 지급 등)

• **불필요한 종이보관 관행을 타파**하고 Paperless 연구행정 환경 정착

붙임 규제 개선 전후 비교

현행	개선 후	개정 법령/시기
디지털 플랫폼·서비스		
· eSIM을 포괄하지 못하는 법령 - 현행 법령*은 USIM을 기준으로 SIM 개념을 협소하게 정의 * 상호접속기준, 무선설비기술기준	**· 포괄적 기술기준 채택** - SIM 개념에 eSIM도 명확히 포함되도록 법령 개정(온라인 개통 간편, 하나의 폰으로 두개 전화번호 이용 가능)	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시행('22.9)
연구자		
· 우수 해외연구자 유치를 위한 규정 미비 - R&D 연구비 항목에 해외 연구자의 체재비나 장려금 항목 부재, 지원에 한계	**· 연구비 제도 개선** - 국가연구개발 연구비 항목으로 해외 연구자 유치 체재비와 장려금 명시	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 ('22.9)
· 연구행정 현장에서 종이문서 보관 관행 - 종이문서 보관 필요가 경감되었으나(혁신법), 연구기관의 대면결재 관행 지속	**· 불필요한 종이문서 관행 타파** - 가이드라인 배포(감사원 협의), 전자문서 효력(전자문서법) 홍보 등으로 관행 타파 * 디지털플랫폼정부 선도 프로젝트 추진	

2 공공기관 혁신

〈 추진방향 〉

◆ R&D 관점을 넘어, **산학연 협력**을 결집하며 **국가 혁신성장**에 기여하는 **국책기관**으로 재도약

- **국정과제 달성**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제도·운영 혁신

❶ 공공기관의 디지털 플랫폼화 추진(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업)

○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에 맞춰, **과기정통부 소관 50여개 공공기관**부터 우선 추진 ⇒ **행정효율 향상(디지털)** 및 **산학연 협력 구심점(플랫폼)화**

-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 등 국가 R&D 플랫폼·서비스 연계

❷ 초격차 전략기술, 디지털 혁신 등 임무지향 국책기관으로 전환

○ **부처-기관 합동점검 ⇒ 국정과제 등 역할과 임무 혁신**(연내)

구분	대상	주요 임무
연구기관	과학기술 출연연(KIST, ETRI), 특성화대학(KAIST), IBS 등 42개	• 10대 전략기술 **핵심R&D** 기획 및 수행 • 과학기술·디지털 **우수인재 양성기지** • **지역 과학기술·디지털혁신의 플랫폼**
연구지원기관	한국연구재단, KISTEP, 정보통신산업진흥원, KISA 등 11개	• **정부R&D 성과체계** 고도화 및 스케일업 • **디지털 산업생태계 및 기반** 혁신 추진 • **민간R&D 역량강화 지원**
기타기관	우편사업진흥원 등 7개	• 대국민 서비스 고도화

❸ 혁신적 운영 위한 경영효율화 및 규제혁신 선도

○ 국민 눈높이에 맞춰 **물적 공간 정비·축소**, 임무 외 불요불급한 **지출 구조조정 및 예산 절감 등 추진**

○ R&D 효율화를 위해 **현장의 모래주머니 규제는 과감하게 걷어내고, 채용·보수 등 인사혁신 병행**

* 예) 주52시간 → 재량근로제 / 블라인드 채용 완화 / 일률적 출입규제(협업 저해) → 보안등급 차별화 등

3 위원회 정비

〈 추진방향 〉

◆ **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**(설치근거 : 「헌법」 제127조) 등 상위 위원회를 중심으로, 그간 **산발적으로 설치**한 다수 위원회 **통폐합**

□ 대통령 소속 위원회

총 3개 ⇒ 폐지 1, 소속변경 1, 유지 1

○ **4차산업혁명위원회**는 **폐지**, **국가지식재산위원회**는 총리 **소속**으로 변경

○ **국가우주위원회**는 누리호 발사 성공을 계기로 촉발된 **대한민국 '우주경제' 비전** 실현의 상징이면서,

- **우주정책**의 **범위**가 R&D에서 안보, 산업으로 **확대**되고 있으므로, **범부처 역량 결집·조정**을 위해 **'대통령 소속 위원회' 유지**로 건의

* 미국, 일본 등도 국가 최고 의사결정자가 위원장인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정책 결정

□ 총리 및 부처 소속 위원회

총 25개 ⇒ 폐지 10, 소속변경 2, 유지 13

○ **총리 소속 2개 위원회**(원자력진흥위, 정보통신전략위) 모두 **부처 소속**으로 변경

○ 부처 소속 위원회 **23개** 중 **10개** 통폐합, 13개 유지

- **순수 자문 성격**의 위원회는 **단순 폐지**(3개, 국제과학기술벨트협의회 등)

- 기본계획 심의 등 **전문성 확보**를 위해 설치한 위원회(5개), 성격이 유사(2개)한 위원회는 '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' 등 **타 위원회*로 통합**

* (예)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, 국가핵융합위원회 등 → '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'
인터넷주소정책심의회 → '정보통신전략위원회'

- **대체 불가능**하거나 분쟁 조정 등 **준사법적 성격을 보유**한 경우만 **존속**(13개,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등)

☞ 과기정통부 관련 **전체 28개 위원회** 중 **11개 폐지** 및 3개 소속 하향 (50%)

▷ 대통령 소속 : 국가우주위원회(유지), 국가지식재산위원회(소속 하향), 4차산업혁명위원회(폐지)

▷ 총리 소속 2개 : 모두 부처 소속으로 하향 ▷ 부처 소속 23개 : 10개 폐지, 13개 유지

붙임 **위원회 현황** : 폐지, : 소속 하향

위원회명	소속	설치근거	위원장	위원 수 (공무원 제외)
국가우주위원회	대통령	법	국무총리	9
국가지식재산위원회	대통령	법	국무총리	24
4차산업혁명위원회	대통령	운영규정(령)	위촉직	20
원자력진흥위원회	총리	법	국무총리	6
정보통신전략위원회	총리	법	국무총리	13
주파수심의위원회	국무조정실	법	국무조정실장	3
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	부처	시행령	성과평가 정책국장	10
공익성심사위원회	부처	법	2차관	6
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	부처	법	장관	9
국가핵융합위원회	부처	법	장관	9
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	부처	법	장관	12
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	부처	법	과학기술 일자리혁신관	2
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	부처	법	1차관	15
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	부처	법	2차관	7
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	부처	법	장관	8
성과지표심의위원회	부처	법	성과평가 정책국장	14
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	부처	시행령	1차관	10
연구개발특구위원회	부처	법	장관	9
한국연구재단PM 외부평가위원회	부처	법	위촉직	9
우정사업운영위원회	부처	법	위촉직	9
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	부처	법	위촉직	11
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	부처	법	위촉직	9
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심의회	부처	시행령	2차관	7
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	부처	법	1차관	10
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	부처	법	2차관	9
전문심의회	부처	시행령	민간위원(호선)	9
신기술·서비스 심의위원회	부처	법	장관	13
디지털서비스심사위원회	부처	법	정보통신 정책실장	12
계	대통령 3개 총리 2개 부처 : 23개* *국무조정실 1개	법: 23 개 령: 5 개		10.1

참고 **과기정통부 국정과제 개요**

◇「(약속14)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」를 중심으로, **총 10개 과제** 주관(단독주관 7개, 공동주관 3개)

단독주관

□ 국가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(국정과제 74)

○ 국가R&D 100조원 시대,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**국가 과학기술 시스템을 재설계**

- 국가 당면 문제 해결을 위한 **임무지향적 과학기술 체계** 마련, **R&D 예산** 정부 총지출의 **5% 수준 유지, 중장기 투자전략** 수립, 통합적·전략적 **R&D 예산 배분·조정체계 마련** 등

□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 (국정과제 75)

○ 기술패권 경쟁시대, 글로벌 시장선도와 **국익·안보**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**전략기술 육성**

- 기술육성 **전략로드맵** 수립, **R&D 투자 확대**, 범부처 차원 **임무지향형 프로젝트 기획·추진** 등

□ 자율과 창의 중심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 양성 (국정과제 76)

○ 연구자 주도 **창의·도전적 기초연구 투자** 확대, **대학 역할 강화, 과학기술인재의 전주기 지원체계** 구축(장학·병역제도 확대·개편, 신기술·신산업 분야 여성 전문인력 양성 확대 등)

□ 민관 협력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(국정과제 77)

○ 민관의 역량 결집을 통한 **AI·데이터·클라우드 핵심기반을 강화**(대규모의 **도전적 AI R&D**, 민간이 필요한 **데이터 개방 확대** 등)하고,

- 메타버스·디지털플랫폼 등 **신산업을 육성**(일상·경제활동 지원 메타버스 서비스 발굴, **디지털플랫폼 자율규제체계** 확립 등)

□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 (국정과제 78)

○ 5G·6G 네트워크 **인프라 고도화**(농어촌 지역 5G전국망 완성), **사이버보안** 대응력 확보(사이버보안 10만인재 양성)로 **디지털 기반을 강화**하고,

- 지역·산업 분야별 **디지털 융합·혁신을 가속화**

□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(국정과제 79)

○ 미래 **우주 분야 핵심 경쟁력** 확보(독자 발사체, KPS 개발 등)와 **민간 중심 우주산업** 활성화(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·육성)로 우주개발을 추진하고, 우주개발 **선진국**과도 **공동협력**(달탐사선 발사, 아르테미스 계획 참여 등)

□ 지방 과학기술 주권 확보로 지역주도 혁신성장 실현 (국정과제 80)

○ 과학기술 기반 **지역자생력 강화**(지역주도 원천기술 R&D **중장기 프로젝트** 추진, **지역 대학·연구소 협력·공간집적** 지원, **연구산업진흥단지 신규 지정** 등)로,

- **지역혁신 선순환 체계**(R&D→창업·기업 성장→신산업·일자리 창출→R&D 재투자) 완성

공동주관

□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(과기정통부·행안부·개보위) (국정과제 11)

○ 민·관이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,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 구현을 위해 **민간플랫폼 연계 공공서비스 개발, 데이터 분석**을 통한 국정운영의 과학화, **네거티브 방식의 공공데이터 전면개방** 등 추진

□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(과기정통부·방통위) (국정과제 27)

○ 미디어에 대한 **낡은 규제를 개선**(방송사업 허가·소유·겸영 규제 완화 등)하고, OTT 등 **디지털미디어·콘텐츠 산업의 혁신성장 지원**(OTT 세액공제·자율등급제, 글로벌 전진기지 구축, 국내 OTT·제작사 동반 해외 진출)

□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(과기정통부·외교부·국방부·국정원) (국정과제 101)

○ 범정부 차원 협력체계 공고화, 사이버 방어체계 및 **국제공조 시스템 강화** 통해 안전한 사이버환경을 제공하고,

- **기술·산업 경쟁력** 제고, **인재 육성**으로 사이버안보 기반 공고화